

수도권 규제완화 결사반대를 위한 결의문(안)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 2008. 10.

발 의 자 : 박세채의원 외 10인

1. 주 문

- 정부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과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수도권 규제완화 관련 법안을 개정 발의하고, “국가경쟁력 제고”라는 미명하에 수도권 규제완화를 위한 명분 쌓기에 급급한 실정임
- 이에 우리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시도를 즉각 중지할 것을 요구하며,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 규제 완화”를 전제로 한 국가균형 발전정책 방침을 확고하게 천명할 것을 촉구하고자 함

2. 제 안 이 유

- “국가경쟁력 제고”와 “경기부양”이라는 미명하에 시도 중인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은 수도권의 과밀화로 인한 삶의 질 악화와 지방의 피해에 따라 지방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들고, 지방 자치의 근간을 송두리째 흔들음으로서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게 될 것이며, 국토의 균형발전 정책과도 정면 배치됨
- 이에 따라 구미시의회는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한 국가 균형발전 의지 퇴색에 격분, 국가균형발전은 흔들림 없이 추진 되어야 할 헌법정신이며, 국민의 기본권임을 재확인하고 지방의 생존권 확보 차원에서 수도권 규제완화 결사반대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여 40만 구미시민과 함께 우리의 뜻을 널리 알리고자 함

3. 참고사항

- 붙임 결의문

결 의 문

- 수도권 집중의 심각성은, 면적은 전국토의 11.8 %에 불과하지만 인구는 전 국민의 49%, 은행 예금의 68%, 100대기업 본사 92%, 공공기관 청사는 85%가 수도권에 밀집해 있으며,
 - 이러한 수도권의 비정상적인 과밀화 문제는 매년 교통 혼잡 비용 12조원, 대기오염 개선 10조원, 환경개선 비용으로 4조원 등 사회적 비용을 낭비할 뿐 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켜, 세계속의 국가로 발돋움 하는데 큰 짐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 정부는 국토의 균형발전으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모든 국민이 고루 잘사는 복지국가를 지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가경쟁력 제고”와 “경기부양”이라는 미명하에 수도권 규제완화를 노골화하고 있음에 비수도권 2,500만 국민과 함께 분노하는 바이다.
 - 이에 우리 구미시의회의는 40만 구미시민과 함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강력하게 규탄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정부는 “선 지방발전”, “ 후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을 천명하고, 지방분권과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1. 정부는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한 비수도권의 피해화는 국가경쟁력 약화로 “수도권과 지방”, “정부와 국민”에게 모두 불행과 고통이 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각성하라.

1. 정부는 인구 및 정치·경제·행정·문화 등에 관한 기능을 수도권과 지방에 적정하게 재배치하여, 지방분권과 지방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으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갈등구조 해소 및 상생방안을 제시할 것이며, 일관성 있는 정부정책을 추진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1. 우리 구미시의회 의원 모두는 지방발전 대책 없는 정부의 일방적인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대하여 지방의 생존권 확보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할 것을 40만 구미시민과 함께 결의한다.

2008년 10 월 일

구미시의회 의원일동